

“AI 시범도시 광주”... 정부·정치권, 국가 NPU 센터 급부상

광주시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뒤 대안 모색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핵심공약인 AI중심도시 광주 구축에 정치권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에 이복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광주 동남) 의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광주가 AI컴퓨팅 지원과 연구, 인력 양성 기능이 하나로 집적된 국가 AI시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와 ‘국가 AI연구소 광주 설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AI 집적단지 2단계인 광주 AX실증밸리 계획과 연계해 AI 추론 단계 실증을 위한 전용 컴퓨팅 자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며 외산GPU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NPU를 실증하기 위해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속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에는 AI반도체를 설계하는 에이직랜드·에이플러스·퓨리오사·리벨리온 등 팹리스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1단계(2023~2024년) 2년 간 200억 원 규모 NPU 실증과 검증사업을 통해 국산NPU를 출시했다. 2단계(2025~2027년) 400억 원 규모의 고도화·상용화 사업에도 현재 6개사가 참여해 국산 NPU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NPU는 AI기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연산 전문 칩으로 그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안도걸 의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뉴스

안도걸 의원, 국회 질의서 국가 NPU 컴퓨팅센터·AI연구소 제안

김민석 국무총리 “AI 핵심도시 광주... 속도감 있게 대안 마련 중”

래픽처리장치(GPU)는 AI모형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인 반면 NPU는 GPU로 개발한 AI 서비스(추론)에 적합하고 전력효율이 높아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센터를 능가하는 (NPU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2020년부터 추진된 AI집

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가 AI데이터센터, AI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AI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갖춘 중심축이자 AI 산업 전주기를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라며 국가 AI 시범도시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광주를 AI 핵심 선도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신속한 대안 모색을 약속했다.

특히, 김 총리는 “AI 시범도시 광주 구축에 관심을 갖고 관여해 왔다. (국가AI 컴퓨팅센터와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 못지

않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광주가 AI 핵심 선도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 등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5일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인공지능 전환(AI) 시티와 6G, 한국형미래도시 포럼’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 NPU산업 생태계 조성 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선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NPU 전용 컴퓨팅센터 유치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기조연설을 마친 김 시장은 배 부총리를 국가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과 함께 국가AI연구소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메가센트릭스형 국가AI집적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김병남 기자

임산부·영유아 가정 교통비, 자치구마다 제각각

광주 동·서·북구만 지원, 광산·남구는 제도 공백

정다는 시의원, 함강서 “조례로 근거 마련 필요”

광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다는(민주당·북구)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는 ‘아이키움 올 인(AI in) 광주’를 비전으로 51개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다”며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서·북구·북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동구 맘택시’에 5500만 원, 서구는 둘째 이상 가정 대상 ‘아이돌맘 행복택시’에 5000만 원, 북구는 영유아가정(0~24개월)을 대상으로 ‘아이맘 교통비’에 1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광산구와 남구는 관련 제도와 후속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아동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그 공백이 더욱 크다.

서울·인천·울산은 각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근거를 포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전·대구·세종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에 임산부를 교통약자에 포함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자치구 간 격차 해소나 통합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 향후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내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남성 피해 지원시설과 상담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광수 기자

몸 낮춘 정청래 “취임 100일 큰 의미 없어”

정청래 대표,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건 봉사 결정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 국정 뒷받침에 힘 기울여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늘이 당 대표 취임 100일이지만 99일든 101일든 큰 의미는 없다”며 “말보다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집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했다”며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것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봤다”고 했다.

또 “요즘 동물들, 특히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는 국민들도 많은데 (동물 보호)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현장에 왔다”며 “동물도 생명이고 또 우리 사람도 동물 중에 한 종이라고 본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동물도 함께 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그러면서 “말 못하는 동물들이 여러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를 구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과 함께 오늘 마음을 나누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생략 결정은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칭하면서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제동을 걸자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또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며 관례로 하던 취임 100일 간담회를 하지 않는 등 자세를 낮춘 상태다. /이광수 기자

광주 AI 2단계, 정작 광주 몫 국비는 5%... “사업 재조정해야”

7일 행감서 “6000억원 중 4000억은 R&D 전국 분산, 속빈 강정”

“AI플랫폼 등 제외하고 죄다 R&D”... 시 “아쉬움 속 보완책 강구”

6000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이 실증과 레퍼런스 확보보다는 연구개발(R&D)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면 속 빈 강정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당·광산5)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000억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광주 AI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6000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하

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핵심 기반 구축’ 306억 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4000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돼 전국으로 분산 될 경우 광주경제와 기업 혜택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단계(R&D 600억원) 당시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북은 1조 사업에 실증센터 4개, 대구는 연구소 3개 배치를 명시해 R&D 예산과 성과를 지역에 묶어두는 전

략을 썼다”며 “광주는 ‘광주형’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기업이 광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증해야 하는 조항조차 없어 전국 R&D의 ‘테스트 장소’만 제공하고 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AI는 R&D보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과 ‘레퍼런스 확보’가 사업화의 핵심임에도, 2단계 사업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1단계에서 구축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핵심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업 추진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AI사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공지능사업단이 전문기나 의회와 협의 없이 직제를 개정했다”며 “50명 정도의 조직에서 3분부 체계가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단계는 1단계 기반 위에 광주기업들이 마음껏 실증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기회의 땅’이 돼야 하는데, 세금 1500억 원을 붓고 6000억 원짜리 R&D플

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제안 요청서에 ‘광주 실증 의무화’와 ‘지역 기업 쿼터’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강수훈(민주당·서구1) 의원도 “2단계(AI 플랫폼과 AI 인스페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R&D로 채워져 있다”며 “사업 단에서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 ‘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AI컨퍼런스 당시 업무협약을 맺은 337개 기업은 ‘인공지능 실증도시가 되겠다’는 말을 믿고 왔는데 얼마나 아쉽고 허탈하겠느냐”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R&D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아쉽지만 R&D 단계에서도 보면 상용화 단계에 있는 R&D도 있다”며 “6000억대 사업에서 광주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현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